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08
----------	-----

제출연월일 : 2008. 10. 27.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

나.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의2”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건축법」 제23조”를 “「건축법」 제27조”로, “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업무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①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 ----- -----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 -----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① ~ ③ (생략) ④시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3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8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건축법」 제27조----- -----업무신고를 한 자-----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생략) 1. (생략) 2.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신축(증·개축 포함)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 4. (생략) ② (생략)	제19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 (신·재생에너지센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관련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재생에너지분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3. 기보급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관리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관리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11.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12.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금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관련 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 에너지기본법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